

2017년도 시행 제59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형 사 소 송 법

응시번호

성 명

<제 1 문>

甲은 상습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직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려는 의도를 숨기고 투자금 유치 명목으로 피해자 A에게 거짓말을 하여 수회에 걸쳐 4억 원을 교부받았다.

사법경찰관은 甲을 적법하게 긴급체포하면서 그 현장에서 甲이 소지하고 있던 ‘투자금 유치계약서’에 대하여 甲의 동의를 받고 위 계약서를 제출받아 압수조서를 작성하였고, 甲은 변호인이 참여한 조사과정에서도 임의로 제출한 것으로 진술하였는데 위 계약서에 대하여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는 않았다.

이후 사법경찰관은 적법한 압수수색을 통해 甲이 자신의 처에게 보낸 이메일 출력물을 확보하였다. 그 이메일에는 “내가 A를 속여 투자금을 받았는데 그 돈을 송금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검사는 甲에게 사기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甲에 대하여 상습사기죄로 기소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리 중이다.

그 이후 피해자 A는 9천만 원 상당의 추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甲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검사는 추가수사에서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甲에 대하여 사기죄로 추가기소하였다.

1. 甲은 제1심 법정에서 위 이메일을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 이메일 출력물이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10점)
2. 甲이 위 투자금유치계약서에 대하여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위 투자금유치계약서를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10점)
3. 제1심 법원은 추가기소된 甲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가? (10점)
4. 위 사건에 대하여 징역 2년이 선고되었고 甲만이 항소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항소심 계속 중인 상황에서, 만일 검사가 피해자 A에 대한 이득액이 합계 5억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다면 법원은 어떠한 재판을 하여야 하는가? (20점)

제 2 문

〈제2문의 1〉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甲은 공무원인 乙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甲은 뇌물 공여 사실을 인정하였지만, 乙은 뇌물 수수 사실을 부인하였다. 검사는 甲, 乙을 각각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로 함께 기소하였는데, 제1회 공판기일에 甲은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乙은 부인하였다. 이에 검사는 위 건설업체 상무 A를 참고인으로 조사하여 A가 甲으로부터 “乙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었다.” 라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을 기재한 참고인진술조서를 제2회 공판기일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 외의 다른 증거는 없는 상황이다.

1. A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중 甲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이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14점)
2. A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법원은 甲, 乙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할 수 있는가? (10점)
3. A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甲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할 수 있는가? (6점)

〈제2문의 2〉

사법경찰관 P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이하 ‘도주차량죄’라 한다)의 범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자동차 정비공장을 탐문수사하던 중 X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정비공 A로부터 앞 범퍼가 파손되고 혈흔이 있는 승용차를 수리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P는 위 승용차의 차적을 조회하여 소유자가 甲이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甲을 긴급체포하였다.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甲은 “친구 B에게 위 차량을 빌려주었는데 B가 교통사고를 낸 후 위 차량을 빨리 수리하여 증거를 없애 달라고 부탁하기에 수리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고, B의 소재가 밝혀지지 아니하여 검사의 지휘로 甲은 석방되었다. 검사는 도주차량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증거인멸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여 甲을 기소하였다.

1. 위 사안에서 공소사실의 예비적 기재는 적법한가? (10점)
2. 제1심 법원은 증거인멸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도주차량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법원의 조치는 적법한가? (5점)
3. 석방된 甲을 수사기관이 법원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할 수 있는가? (5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